

이념 투쟁에 내몰리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과 노동정책*

임운택 계명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1. 문재인 정부의 경제 및 고용정책의 민낯

문재인 정부가 외환위기 이후 구조화된 극단적 노동유연화에 기초한 신자유주의적 경제 패러다임을 타파하기 위해 내세운 ‘소득 주도 성장론’이 심하게 흔들리고 있다.

첫째, 국제수지 흑자 행진이 지속되고 심지어 지난 5월 기준 경상수지 흑자가 86억8천만달러로 2017년 이후 가장 높게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한국은행 2018년 7월 5일 발표), 민생에 깊숙이 영향을 주는

* 이 글에서는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기본 가치를 검증할 수 있는 노사 관계법이 아직 논의도 되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노동정책에 관해서는 판단을 유보하고 경제정책과 고용정책(일자리정책)에 논의를 집중하고자 한다.

고용 지표는 거꾸로 가고 있다. 20~30대 경제활동인구의 감소에 따라 동일 연령대의 취업자 인구가 줄어드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해도 40~50대 중장년층의 제조업, 서비스업 취업자 수의 감소는 통계 청장을 교체할 만큼 요란법석을 떨어도 별반 개선을 기대하기 어려운 구조적 특성을 보인다.

둘째, 2년 연속 두 자릿수 최저임금 인상이 경기와 고용 악화의 주범으로 내몰리고 있다. 소득 주도 성장은 프레카리아트화(불안정화)된 노동시장에서 불안정노동자들의 소득 및 사회안전망 개선을 통해 소득분배율을 높이고 이를 통해 유효수요를 창출하여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데 주요 목적이 있다. 그러나 소위 소득 주도 성장 정책에 따라 노동소득률(국민소득에서 노동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조차 별로 개선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평상시 재벌과 대기업의 하청업자 노릇을 하던 정치인과 신자유주의자들은 소득 주도 성장론이 마치 경제 침체의 핵심 원인을 제공한 주범이라도 된 듯 이 정책의 철학에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면서, 오랫동안 시장에서의 적자생존 상황을 방치해 놓고 정치적으로만 이용해 왔던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수호자 노릇을 하는 우스꽝스러운 상황마저 발생하고 있다. 《뉴스타파》에 보도된 삼성 장학생 명단으로 곱학아세의 전형적 인물이 된 어느 학자에게도 시장의 ‘을’을 대변하는 반전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니, 소득 주도 성장론의 정치적 효과는 대단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이러한 상황은 문제인 정부 스스로 불러온 바가 크다. 최저임금 인상폭 때문에 아우성을 치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에 대한 정치적 불안감 때문에 올 초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확대시키면서 소득/임금 주도 성장에 대한 회의론에 불을 지폈고, 그렇다고 이를 보완할 만

한 여타 산업정책은 분명하게 제시하지 못한 채 창조경제와도 별 차별성을 보이지도 않는 ‘혁신 성장’의 허울 아래 고용정책의 미래도 가늠할 수 없는 4차산업혁명 논의만 무성하니 정부의 경제정책과 고용정책에 대한 신뢰가 생길 리 만무하다.

2008년 ‘대침체(Great Recession)’ 이후 금융시장 주도적 신자유주의 경제 패러다임으로 만신창이 된 자본주의가 1960년대 이후 장기 침체에 들어선 자본주의의 수요 측면을 만회하기 위해 기술 주도적 산업구조 조정(소위 ‘4차산업혁명’ 패러다임을 표방한 새로운 슈페터주의)이나 노동생산성 증대(최저임금을 비롯한 노동소득률 재조정), 혹은 생태 친화적 발전 패러다임 등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자본주의 전환의 시도가 이루어지는 마당에, 소위 ‘촛불혁명’의 유산으로 탄생했다는 문재인 정부는 노동 친화적 경제 패러다임은커녕 여전히 신자유주의의 명령에 사로잡혀 있는 형국이다. 아래에서는 간략하게 그 원인과 대안을 탐색해 보고자 한다.

2. 소위 ‘소득 주도 성장론’의 신기루(Fata morgana)

촛불항쟁을 계승하고 사회 도처에 있는 적폐 청산의 과업을 떠안고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출범 당시 저성장, 일자리 부족, 사회경제적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기업, 중소기업, 사용자와 노동자 모두가 ‘더불어 성장하는’ 소득 주도 경제를 경제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면으로 내세웠다(국정기획자문위원회, 2017년 7월).

이때 성장은 좋은 일자리 창출로 가계소득을 늘리고 노동시간과 비정규직을 줄이며 고용의 질을 높이는 ‘늘리고, 줄이고, 높이는’ 전

략과 연동된다면서, 이를 위해 정부는 81만 개 공공부문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기업과 노동자들이 사회적 대타협과 혁신을 추구할 수 있도록 유도하며, 안정된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해서 가계부채 해결과 실직과 은퇴를 대비한 일자리 안전망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하였다.

이러한 점을 반영하여 국정 100대 과제 중 ‘더불어 잘사는 경제 전략 1’에 제시된 주요 공약은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기에 간략하게 주요 핵심 전략만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더불어 잘사는 경제전략 1〉 (번호는 국정과제 번호)

16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좋은 일자리 창출 (고용부)

17 사회서비스 공공인프라 구축과 일자리 확충 (복지부)

18 성별, 연령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 강화 (고용부)

19 실직과 은퇴에 대비하는 일자리 안전망 강화 (고용부)

20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서비스 산업 혁신 (기재부)

21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한 가계부채 위험 해소 (금융위)

22 금융산업 구조 선진화 (금융위)

이러한 핵심 경제 전략은 국정 100대 과제 중 ‘전략과제 2’(활력이 넘치는 공정경제: 재벌총수의 소유지배구조 개선, 사회적경제 활성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포함), ‘전략과제 3’(민생경제), ‘전략과제 4’(과학기술이 선도하는 4차산업 혁명), ‘전략과제 5’(중소벤처가 주도하는 창업)와 두루 연계되어 있다.

국정 100대 과제에서 다소 혼란스럽게 제시된 주요 경제정책 과제는 집권 2년 차에 들어서면서 ‘소득 주도 성장 - 혁신 성장 - 공정경

제'의 삼박자 경제론으로 정리되었다. 다소 복잡해 보여도 기본적으로 성장과 분배의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겠다는 말이다. 그것도 공정하게. 문제는 그러한 정책적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실행 계획과 이념적 지향이 정부의 주장처럼 명료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우선 국정과제에서 제시된 정책의 상당 부분은 지난 '이명박근혜' 정부에서도 이미 낮은 정책들이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정부가 내세운 소위 '소득 주도 성장' 혹은 '포용 성장'은 무엇이란 말인가?

문재인 정부가 강조하는 '소득 주도 성장'이나 '포용 성장론'은 모두 오랫동안 신자유주의의 침범 역할을 해 왔던 국제기구(ILO, OECD)가 2008년 '대침체' 이후 세계경제를 구출하기 위해 내놓은 대표적 처방책이다. 196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포드주의 축적체제의 위기는 수요 창출의 위기였으며, 이 문제는 국가채무 증대, 시장의 세계화, 가계부채 증대 등의 처방을 통해서도 해결되지 못했다. 이러한 처방은 오히려 기술 발전에 따른 급격한 산업구조조정과 금융시장의 논리에 따른 상시적인 노동의 합리화(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지불노동을 최소화하고 개별 노동력의 생산성을 최대치로 올리는 것), 세계시장 경쟁의 강화에 따른 노동시장의 분절화와 노동시장유연화 전략으로 인해 노동의 프레카리아트화가 가속화되고 전 지구적 차원에서 불평등이 확대되는 것은 물론 자본주의경제 전반에 지속적인 수요 부족(즉, 자본의 과잉축적)을 초래하였다. 생산적 투자처를 잃은 유흥자본이 수익을 극대화하기 기웃거리는 엘도라도는 금융시장과 부동산이고, 이러한 경향은 2000년대 이후 전 세계적으로나 국내에서도 쉽게 확인되는 바다. 케인스가 “블로소득자에게 죽음을 내리자”라고 선언하고 자본주의가 ‘황금시기’를 구가한 지 불과 수십 년 만에 블로소득

〈표 1〉 고용 주도 성장, 임금 주도 성장, 소득 주도 성장 패러다임 개요

	고용 주도 성장 (1)	임금 주도 성장 (2)	소득 주도 성장 (3)= (2)+A
기본 방향	고용률 증가	노동소득 증대 → 노동분배율 개선	노동소득과 지역업 소득증대 → 노동분배율 개선
주요 정책	일자리 창출 고용의 질 개선	최저임금제 강화 생산성 임금협약(생산성과 임금 상승의 연계)	최저임금제 강화 생산성 임금협약(생산성과 임금 상승의 연계) (A) 지역업자의 소득 안정 근로빈곤층 생활 소득 보장 등 사회보장제도
수요	내수 증가(소비 증가) 수출 증가	내수 증가(소비 증가)	내수 증가(소비 증가) 수출 증가
공급	노동 투입 증가에 따른 생산성 향상 투자 증가에 따른 생산성 향상	임금 상승의 생산성 향상 효과 고부가가치 부문으로의 산업구조 개선 효과	노동 투입 증가에 따른 생산성 향상 투자 증가에 따른 생산성 향상
비고	실업률이 높고 고용률이 낮은 국가	중앙집중적 노사 단체교섭 제도가 발달된 국가	지역업 등 비공식부문 취업자 비중이 큰 국가

출처: 홍장표, 「한국경제의 대안적 성장모색」, 2014년 7월 10일 국회 발표문, 22쪽

자들은 완벽하게 부활하였고 자본주의는 다시 위기에 빠지게 되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제기된 소득 주도 성장이나 포용 성장론은 기본적으로 노동소득률의 제고를 통해 유효수요를 창출하고자 하는 케인스주의적 경제정책의 기본 가치를 반영하고 있으나, 전 세계 어느 곳에서도 이러한 경제정책을 국가의 경제정책으로 채택한 곳은 한국이 유일한 만큼 여전히 신자유주의의 저항이 크며, 그와 동시에 경제 전문가들도 국가별 노동시장구조와 산업정책에 따라 상이한 처방을 내리고 있다(〈표 1〉 참고).

정부의 대표적 경제정책으로 채택이 되든 않든 간에 ‘포스트케인스주의’는 2008년 이후 미국, 일본은 물론 주요 자본주의 핵심 국가에서 대세가 되었다. 최저임금을 인상하고, 연금 및 고용보험 수급 요건 개선, 노인기초연금 강화 등 다양한 사회보장제도의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등 문재인 정부는 <표 1>의 (3)번인 소득 주도 성장론의 처방을 따르고 있는 듯 보인다. 그러나 앞서 언급했듯, 소득 주도 성장론의 성과가 가시화되기는커녕 이 정책의 핵심 주창자였던 홍장표 교수는 경제수석의 지위에서 역할도 모호한 소득주도성장특위 위원장으로 밀려났으며, 이 정책의 입안에 별로 개입하지도 않아 보이는데 줄지에 소득 주도 성장론의 수호자가 된 장하성 정책실장은 작년 최저임금 16% 인상에 자신도 놀랐다는 어이없는 반응을 보이기도 하였다(2018년 9월 3일 JTBC 뉴스룸 인터뷰). 더불어 소득 주도 성장론이 동네북이 되다 보니 정부는 이제 경제정책이나 고용정책과의 연계성이 분명하지 않은 채 취약 계층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복지정책을 소득 주도 성장론의 보완재라도 되듯 최근에는 부쩍 ‘포용 성장론’을 적극적으로 내세우기에 이르렀다. 유감스럽게도 개념의 성찬에 비해 가치의 방향성은 매우 모호하기 그지없다. 말 그대로 정부가 2014년 OECD가 권장한 포용 성장론을 추구한다면 더욱 적극적으로 공정한 ‘소득 및 자산 분배’를 추구해 나가면서 성장론을 추동해야 할 것인데, 기업에 대한 각종 규제 장벽을 없애겠다는 노력만큼이나 다수 노동자의 주요 소득 원천이자 소득분배 차원, 내수 창출과 고용 증대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임금에 대한 언급은 꺼리고 있다. 결국,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과 철학이 신자유주의와의 이념 투쟁에서 패배한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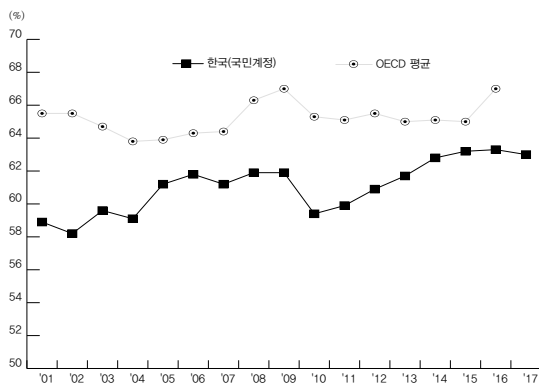
실제로 올 한 해 동안 소득 주도 성장론을 둘러싸고 발생한 일들을 보면 대대체 정부의 정책 집행자들이 소득 주도 성장론의 배후에 있는 (포스트)케인스주의의 철학은 제대로 이해는 하고 있는지 경제 철학이 의심스러울 뿐이다.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시장 경직에 직접적 영향을 미쳤다는 시중에 떠도는 논의를 수긍하려면 최소한 임금 인상이 노동소득분배율에라도 긍정적 영향을 미쳐야 할 텐데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못하고 있다. 찢끔찢끔 오르던 최저임금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한국 노동자의 노동소득분배율은 지난해 기준 63.0%로 전년(63.3%)보다 0.3%p 감소했으며, 이는 2016년 OECD 평균(67.0%)보다 4%p 낮다(2018년 7월 5일 발표된 고용노동부 ‘통계로 보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모습’). 고용부는 OECD 다른 국가에 비해서 높은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비율(25.5%)을 이에 대한 원인으로 들고 있다(자영업자 소득은 노동소득에서 제외됨). 그러나 국내의 자영업자 비율(25.5%)이 OECD 국가 중 5위지만 2016년 기준 노동소득분배율(63.3%)이 OECD 28개국 중 21위라는 점을 감안해 보면 웅색한 변명처럼 들린다.

한국의 자영업자 비중도 문제지만 피고용인의 보수는 2016년 기준으로 OECD 34개국 중 23번째이며(OECD 평균 3만9천달러보다 훨씬 적은 2만9천달러), 2016년 저임금노동자 비중은 23.5%로 OECD 평균(16.2%)을 7.5%p 상회한다. 저임금근로자의 비중은 라트비아, 아일랜드, 미국에 이어 네 번째에 해당할 만큼 노동자 간의 임금격차도 심각하다(『중기이코노미』 2018년 7월 5일).

지난 10여 년간의 노동소득분배율을 보면 현재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논란의 방향이 대단히 잘못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국내 노동자

〈그림 1〉 노동소득분배율 (한국과 OECD 평균 비교)



노동소득 분배율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한국	58.9	58.2	59.6	59.1	61.2	61.8	61.2	61.9	61.9	59.4	59.9	60.9	61.7	62.8	63.2	63.3	63
OECD 평균	65.5	65.5	64.7	63.8	63.9	64.3	64.4	66.3	67	65.3	65.1	65.5	65	65.1	65	67	

출처: 『중기이코노미』 2018년 7월 5일에서 재인용.

의 노동소득분배율은 여전히 OECD 평균 노동소득분배율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다(〈그림 1〉). 수년 동안 이어지는 경상수지 흑자에도 불구하고 일자리가 감소하고 노동소득분배율이 개선되지 않는 것은 결국 대한민국의 수출 경쟁력이 반도체, 석유화학과 같이 고용 유발 효과가 제한적인 산업에 집중되어 있고, 저임금과 노동유연화에 기반을 둔 여타 제조업의 수출 경쟁력마저 둔화되고 있으며, 그렇다고 내수 경기도 이를 지탱해 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최저임금의 악마화에 주문을 걸고자 한다면 현 정부의 경제정책과 고용정책이 노동유연화를 금과옥조로 내건 1994년 「OECD 일자리 보고서(Job Study)」에서 한 걸음도 못 나간 채 소득 주도 성장으로부터 기대하는 정책 효과

는 신기루처럼 사라질 것이다. 저임금이 기업가에게 고용과 투자의 동인을 줄 것이라는 믿음은 그들 자신에게 양날의 검이다. 불경기에 가격에 대한 압박과 수요 부족으로 인해 평균적 기업은 오히려 노동과 자본의 추가적 사용에 대한 전략적 결정을 미룬다. 그런데도 불경기 속에서 평균적 기업이 정부의 희망처럼 자본보다 노동에 유리한 구조 조정 과정에 헌신하리라는 기대는 말 그대로 천진난만한 발상이다. 수요 감소는 생산요소의 상대적 가격의 변화에 기업이 적응하는 조건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킨다. 임금이 하락하고 노동시간이 증대하면 국가 경제의 임금 총량은 떨어지게 될 것이며, 이는 수요 감소로 귀결될 것이다. 그러한 점에서 지속 가능한 경제를 위해 명목임금과 고용관계는 대단히 중요하다. 오히려 생산성과 물가 목표inflation target에 조응하는 임금 상승은 경제 전반이 사람과 기술의 능력을 충분히 고용하기에 충분한 수요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3. 경제정책이 성장과 고용 증대를 위한 핵심 열쇠가 되어야

신규 고용 창출은 임금 감소나 임금 분배를 악화시키는 것으로부터 가능한 것이 아니라 생산 성장output growth으로부터 가능하다. 따라서 전체 소득 흐름과 연계되지 않은 독립된 노동시장 분석은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 자본주의 주요 국가에서 고용 주기는 생산 성장 주기와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으며, 이는 2008년 ‘대침체’와 같은 급격한 경기 위축이 임금 유연성과 낮은 소득분배율에도 불구하고 왜 고용을 파괴하는지를 설명해 주는 데 유익한 근거를 제공한다. 거시경제 환경이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방식으로 진화한다는 사실은 다른 거시경제

적 정책 때문이지 국가 간의 상이한 임금 유연성 수준 때문은 아니다.

생산성 증가율을 고려해 볼 때, 일하고 싶은 모든 사람에게 일자리를 창출하기에 충분한 총수요의 증가는 생산성 향상에 따른 수익의 분배에 달려 있다. 저임금을 유지하면서 생산성 수익을 더 많은 자본 소득이나 낮은 산출 가격으로 전환했던 지난 시기의 신자유주의 정책에서 확인되듯 고수익을 내기 위한 임금 억제는 자멸적 행위다. 임금 소득자의 구매력 상승 없이는 현재의 생산 용량을 활용하는 데 필요한 수요 증대가 실현되지 않는다. 유일한 탈출구는 저임금과 경쟁력 개선을 통해 해외 수요를 자극하는 것인데, 이는 전형적인 ‘구성의 오류’를 만들어낸다. 경쟁력은 상대적 개념으로 모든 국가들이 자신의 경쟁력을 동시에 개선할 수는 없는 일이다. 다른 나라의 성장과 고용 증대를 훼손하는 고용 창출은 적자국에서 감당할 수 없는 누적 채무를 만들어낸다. 따라서 생산성 향상에 조응하는 실질임금의 증가는 국내의 효과적 수요량을 만들어내는 데 필수적이며, 그러한 수요는 현재 생산 용량을 충분히 활용하고 성장, 투자, 생산성 증대, 고용의 선순환에 양분을 제공한다.

소득 증대와 고용은 의심의 여지가 없이 고정자본의 투자에 달려 있다. 민간부문이 지배적인 경제에서 그러한 투자는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가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그러한 투자를 지불할 수 있는 재정 조건이 중요하다. 그러한 점에서 공공정책은 수요 측면과 재정 측면을 모두 고려한 투자를 지원해야 한다.

노동시장의 처방으로 유연 임금을 활용하고 불평등이 증대하는 것은 거시경제적 수준에서 경제가 수요 충격(demand shock)에 직면하고 있을 때 전혀 효과적이지 않다. 따라서 유연 임금보다는 오히려 유연 이

익flexible profits이 근대 시장경제의 역동성을 되살리는 데 더 적합하다. 실물경제에서 쇼크는 대외무역이나 해외직접투자와 같은 온갖 종류의 쇼크에 적용하는 임금에 의해서 흡수되기보다는 수익에 의해서 흡수되기 때문이다. 수익이 변화함에 따라 경제는 회복 불가능한 것을 회복시키기보다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는 방향성(아마도 그런 것이 혁신 경제의 실체가 되어야 할 것이다!)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신고전주의적 분절 노동시장이 경제발전의 어느 단계에서도 구조조정의 역할을 하지 못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노동자에게 시장가격을 매기자’라는 OECD 이데올로기의 지속적인 압력으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는 것은 성공적 경제정책을 위해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심리적 피해와 괴로움으로부터 불안정노동자들을 보호하는 조치는 이들의 권리를 위해서도 중요할 뿐만 아니라 경제시스템의 안정적 구조조정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이들을 장기간의 불안정 고용 및 실업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생활수준의 심각한 파괴 없이도 일자리를 찾을 수 있게 하는 강건한 사회안전망이 필요하다.

정리해 보면, 저임금 기조와 불평등의 증대는 고용문제를 해결하는 데 대단히 비효율적인 수단이며, 정부는 임금 하락으로부터 발생하는 부정적인 외부 효과(실업으로부터 발생하는 추가 비용, 내수 증진을 위한 저임금 구조의 방지)를 방어해야 할 책임이 있다. 그뿐만 아니라 이를 위해서는 조직화된 노동, 즉 노조의 연대임금정책도 강조될 필요가 있다. 노동자의 임금(상승)이 개별 기업의 이윤율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전사회적 생산성 증대에서 형성된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산별노조 차원에서 이를 실천한다면 노조의 임금협약은 경제 전반에

〈표 2〉 자본주의 전환 유형

권위적 신자유주의	그린 ^{Green} 경제/자본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적인 구조를 유지하려는 목표 아래 단기적 위기 관리 • 강화된 긴축 정책 • 권위적 정치와 저항에 대한 탄압 • 상징적 차원에서의 사회적·생태적 변경 • 화석화된 생산양식 및 생활양식 • 시장 형태적 규제의 우위 • 성장률과 투자율의 하락 • 위기 경향의 심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속력 있는 합의 • 시장 형태의 규제와 가치 증식 • CCS(Carbon, capture & Storage):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 기술, 극에너지^{Meme-Energy}와 같은 기술적 해결 • 제한적 금융시장 규제, 새로운 금융 수단, 공적인 투자 및 촉진 프로그램 • 이래로부터의 재분배 중단 • ‘사생아 케인스주의’^(Eastard Keynesianism)의 제한적 적용 • 생태자본주의적 생산 및 생활양식으로서의 이행
<p>행위자: 점증하는 사회 분열의 조건 속에서 수동적 항의를 유지하려고 하는 금융 및 화석에너지 산업 분파</p>	<p>행위자: (노조, 녹색당, 진보정당) 사회세력과 생태자본주의적 엘리트 집단과의 합의,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산업자본 세력과의 긴장 관계</p>

* 국가의 과도한 재정지출에만 의존한 사이비 케인스주의를 지칭(조안 로빈슨, Joan Robinson의 용어)

출처: 임문택, 『전환시대의 논리.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의 이중위기 속의 한국사회』, 논형, 2016년, 742쪽

서 대단히 중요한 사회경제정책의 요소가 될 수 있으며, 노사 모두 이를 현실적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은 기본적으로 포스트케인스주의의 기본 철학을 빌어 신자유주의적 경제 및 고용정책으로부터의 전환을 시도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둘 수 있겠다. 그럼에도 경제정책 패러다임의 전환과 관련하여 정부 여당 정책 담당자의 철학적 가치는 여전히 신자유주의의 망령에 사로잡혀 있는 듯하다.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저임금 구조는 대기업 위주의 수출 주도 전략과 불안정한 노동시장

구조가 만들어 낸 낡은 경제시스템의 적폐로 이러한 구조를 정치적으로 존속시키면서 경제 패러다임의 전환을 끌어내는 신출귀몰한 재주는 현재도, 앞으로도 그 누구에게서도 찾을 수 없을 것이다. 각종 선거 때마다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곡소리에 볼모가 되어 링거 주사(단기적 정책자금 지원)를 맞힐지, 아니면 불공정 원하청 관계의 개선과 건강한 중소기업 육성 정책을 통해 자영업자 수를 줄여 나가면서 건강한 고용구조를 만들어낼지는 경제 패러다임 전환의 변곡점이 될 것이다.

앞서 강조했듯 고용을 위해서 저임금이 아닌 성장이 중요한 변수이지만 문 정부에서 이를 추동하는 산업정책은 보이지 않는다. 즉, 미래 노동사회에 대한 전망과 비전이 보이지 않는다. 국내 산업 현장의 실태도 모르는 얼치기 미래학자들의 ‘4차산업 혁명’, 인공지능 담론 대신 보다 기술 변화에 따른 생산 및 공정 과정의 합리화에 따라 변화하는 노동 패러다임에 대한 정책적 대응(기본적으로 자금과 같은 정부 지원금에 의존하는 영터리 민간 훈련 기관에 의존해서는 결코 성과를 낼 수 없는 숙련노동자의 양성 및 향상 훈련 프로그램의 지원체계 구축이 핵심)이 필요하며, 그러한 점에서 독일의 산업 4.0 정책은 타산지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보다 진보적 관점에서 자본주의의 산업구조를 바꾸어 나가는 생태적 자본주의에 대한 전망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표 2〉 참조). 세계은행과 같은 국제기구에서조차 포괄적인 의미에서 ‘그린 자본주의’^{*}를 논의하는 마당에 이에 대한 경제 패러다임의 논의를 더 미룰 수 없다. 가까운 화석에너지를 대체해 가는 노력부터 소비적 ‘제

* 유감스럽게 이 개념은 4대강 사업을 앞세운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론’으로 더럽혀졌으나 국제적 논의에서 사용되는 만큼 이 글에서는 중의적 의미로 사용한다.

국적 생활양식”^{*}을 지양하고 생태 친화적 자본주의로의 이행을 통해 미래 지향적 산업구조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보다 진보적·대안적 산업 패러다임에 대한 정책적 고민 없이 BRICs 국가들과 같은 추격 성장 자본주의국가와 저임금 경쟁을 하는 순간 우리 경제의 미래는 물론 고용의 미래는 암담할 뿐이다. 시대

* 독일의 좌파 연구자 Ulrich Brand와 Markus Wissen의 2017년 저술 “Imperial Leensweise. Zur Ausbeutung von Menschen und Natur im globalen Kapitalismus”에서 사용한 개념.